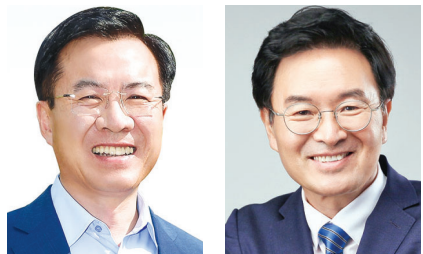


광주 3곳 2인 대결 확정 민주, 경선 레이스 시작

동남갑 운영덕·정진욱
북구갑 조오섭·정준호
북구을 이형석·전진숙
1차 경선 지역 23곳 우선 발표
광주 5곳·전남은 설연휴 이후에

동남갑



운영덕 정진욱

북구갑



조오섭 정준호

북구을



이형석 전진숙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지역 일부 선거구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로, 광주 3곳을 포함해 지역구 23곳을 우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광주 1차 경선 지역 3곳은 광주 동남갑, 북구갑, 북구를 선거구로 2인 경선이 진행되며, 모두 현역 국회의원과 1대1 구도가 형성됐다.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나머지 광주지역 선거구 4곳과 전남지역 8곳 선거구의 경선 후보 발표는 설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남갑은 현역인 운영덕 국회의원과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이 경쟁하게 됐고, 북구갑은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가 맞붙게 됐다.

북구을은 이형석 의원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다만, 이날 경선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일부 예비후보들이 재심 신청을 하기로 해 재심 결과도 주목된다.

이날 1차 경선 후보 발표에 따라 광주 북구갑과 북구를 선거구는 지난 제21대 총선에 이어 두 후보들 간 '리턴매치'가 치러지게 됐다. 앞선 총선에서 조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정 변호사와 전진숙 전 행정관을 경선에서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1차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관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

씩 반영하며,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공관위는 1차 경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와 전남지역의 2차 경선 지역은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하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 역시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경선 지역 발표는 아무래도 설 연휴 이후에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남지역의 경우 선거구 확정 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입력백 공관위원장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대상자에 대한 통보와 관련, "공관위원장인 제가 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명단 또한 저만 가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통보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보 시간은 분명히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이고, 통보받는 분들도 충분히 이의 제기하고 경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대 2천명 증원...전남에 의대설립 외면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정부, 내년 입학정원 대폭 늘려 의사 2035년까지 1만 명 확충 '전남 30년 숙원' 국립 의대 신설 계획 없어 전남도·도민 허탈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관련기사 7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끝내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 지역 국립 의대 설립'을 외면하면서 전남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날 의대 정원 규모를 밝히면서 지역 의대 신설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 의대 졸업자들을 지역에 거주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시 "XX년 의대 신설" 문구를 반드시 명기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쏟았던 전남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계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의회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안에 지역 의대 신설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증원안은 전남을 떠나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정부의 전향적

인 자세와 조속한 응답을 촉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3507명) 이후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한 차례 감축에 합의하면서 지난 2006년(3058명) 이후 여태껏 그대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로,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를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늘렸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경우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 대학별로 배정하되,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지역 인재 전형으로 80%를 충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전형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등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 데는 절대적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응급실 뱅뱅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한몫을 했다.

국내임상사수(2021년 기준·한 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못 미친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당장, 지방 병원들은 매년 의사 구인난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강진·순천의료원 등 공공의료원은 수 차례의 공고에도 의사 확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일을 감수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수입이 많고 근무 환경이 편한 분야로 쏠리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2면으로 계속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죽음에 이르는 '부부 황혼 갈등' ▶6면

KIA 호주 캔버라 스프링 캠프 ▶18면

박물관 기행 - 광양장도박물관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5. 29. 수 ~ 6. 2. 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미래교육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 축제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